

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지침에 대한
설문조사 결과 보고서
(중간보고서)

2025. 7. 18.



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

조사 개요

1. 조사 배경

지난 7월 8일 [지침]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(재무과 -14185, 2025.7.8.) 공문이 발송되었고, 관내 몇 학교에 확인해 본 결과 학교마다 업무 형편에 따라 반응이 달랐다.

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55조에 따르면 검사검수는 사업부서 담당자(공립학교회계규칙 제34조의3에 따르면 학교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)가 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검사검수를 사업담당자에게 맡겨온 것이 아니라 세출담당자가 처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. 물론 이 또한 학교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기에 지역별, 학교급별로 이 지침으로 인한 업무 부담이 얼마나 큰지 조사해 보았다.

2. 조사 설계

- 가. 조사 대상: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전체(4800여명)
- 나. 조사 방법: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
- 다. 조사기간: 2025. 7. 16. ~ 7. 22. (현재 조사 진행 중)

3. 조사 내용

- 가. 응답자 특성: 성별, 직렬, 직급, 근무지, 근무지역, 학교 규모
- 나. 회계사고 근절 지침에 대한 의견
- 다. 이 지침에 따른 업무 증가 여부
- 라. 자유 의견

4. 응답자 특성

[문항1]	귀하의 성별은?	
	[1] 남	436명(34.69 %)
[문항2]	귀하의 직렬은?	
	[1] 교육행정	1167명(92.84 %)
[문항3]	귀하의 직급은?	
	[1] 8~9급	305명(24.26 %)
[문항4]	귀하의 근무지는?	
	[1] 단설유치원	19명(1.51 %)
[문항5]	귀하의 근무지역은? (시군 구분)	
	[1] 시지역	927명(73.75 %)
[문항6]	(문5 시지역 응답자) 귀하의 근무지역은? (시지역)	
	[1] 포항	170명(18.34 %)
	[2] 경주	121명(13.05 %)
	[3] 김천	68명(7.34 %)
	[4] 안동	112명(12.08 %)
	[5] 구미	190명(20.50 %)
	[6] 영주	44명(4.75 %)
	[7] 영천	45명(4.85 %)
	[8] 상주	57명(6.15 %)
	[9] 문경	33명(3.56 %)
	[10] 경산	87명(9.39 %)

[문항7]	(문5 군지역 응답자) 귀하의 근무지역은? (군지역)		
	[1]	의성	33명(10.00 %)
	[2]	청송	26명(7.88 %)
	[3]	영양	16명(4.85 %)
	[4]	영덕	25명(7.58 %)
	[5]	청도	19명(5.76 %)
	[6]	고령	19명(5.76 %)
	[7]	성주	22명(6.67 %)
	[8]	칠곡	63명(19.09 %)
	[9]	예천	37명(11.21 %)
	[10]	봉화	27명(8.18 %)
	[11]	울진	37명(11.21 %)
	[12]	울릉	6명(1.82 %)
[문항8]	(문4 유치원, 학교 응답자) 학교 규모는? (공무원 정원 기준)		
	[1]	1명	29명(2.81 %)
	[2]	2명	187명(18.10 %)
	[3]	3명	229명(22.17 %)
	[4]	4명	252명(24.39 %)
	[5]	5명 이상	336명(32.53 %)

조사 결과 요약

1. 지침에 대한 인식 차이

- 가. 회계사고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(1번 11.3%)과 도움이 되지만 업무에 비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(2번 45.51%)을 합쳐 회계사고 근절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(1번+2번)이 56.81%로 많다.
- 나. 반면,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(38.66%)도 많고 그 밖에 의견 역시 대부분 부정 평가가 많아 이를 합치면 43.19%로 집계된다.

[문9] 회계사고 근절을 위한 종합 방지 대책 공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		
[1]	회계 업무의 기준을 마련해 행정실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.	142명(11.30 %)
[2]	회계사고 근절에 도움은 좀 되겠지만 업무에 비해 실익 없을 것이다.	572명(45.51 %)
[3]	회계사고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.	486명(38.66 %)
[4]	그 밖에 의견	57명(4.53 %)

나. 그 밖에 의견 요약

<부정적 의견 (압도적 다수)>

1) 업무 과중 관련 (가장 많은 의견)

- 1인 행정실의 업무 과중 심화
- 지출담당자 업무 과다로 인한 처리 지연
- 소액 지출까지 불필요한 결재 절차 증가
- 검사검수 업무로 인한 행정력 소요 증가

2) 실효성 의문

- 회계사고 근절에 실질적 도움 안 됨
- 관리자 서명만으로는 회계사고 방지 보장 불가
- 형식적 요식행위에 불과
- 업무량 증가 대비 실익 없음

3) 현장 갈등 우려

- 교사들의 반발과 비협조
- 교감의 업무 거부 사례 발생

- 교원과 행정실 간 갈등 유발 가능성

4) 현실성 부족

- 탁상행정적 지침
- 방학 중 교사 검수 지연으로 업무 차질
- 간식비 등 세부 품목별 처리의 비현실성

<긍정적 의견 (소수)>

- 1) 업무 기준 명확화
- 2) 교원들의 서류 작성 주의 증가
- 3) 법인카드 사용 관리 개선

2. 지침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대한 인식

가. 회계사고 근절 종합방지 대책 지침으로 업무량이 얼마나 많아졌느냐는 질문에 91.41%가 업무가 늘었다고 응답한 반면, 업무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응답은 8.59%에 불과해 큰 차이를 보였다.

나. 특히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는 응답(63.33%)이 절반을 넘어 업무 부담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.

[문10] 이 지침으로 학교(기관) 업무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?

[1]	업무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.	108명(8.59 %)
[2]	업무가 조금 늘어났다.	353명(28.08 %)
[3]	업무가 상당히 늘어났다.	407명(32.38 %)
[4]	업무가 많이 늘어났다.	389명(30.95 %)

교차 분석 결과

- 분석 대상: 경상북도교육청 교육행정직원 설문조사
- 분석 파일: 10개 교차분석 엑셀 파일
- 분석 방법: 카이제곱 독립성 검정 (Chi-square test)
- 유의수준: $\alpha = 0.05$

□ 분석 개요

○ 주요 변수

- 문9: 회계사고 근절 대책 필요성/효과성
- 문10: 업무량 증가 정도
- 교차변수: 직급, 소속기관, 지역구분

○ 총 분석 건수

- 문9 교차분석: 5건
- 문10 교차분석: 5건
- 총 응답자: 약 1,257명 (추정)

□ 통계적 유의성 분석 결과

○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 (5건)

변수 조합	Chi-square	P-value	Cramer's V	효과크기
문10(업무량) × 시지역	51.63	0.008	0.12	중간
문10(업무량) × 소속기관	53.67	< 0.001	0.12	중간
문10(업무량) × 직급	22.62	0.007	0.08	작음
문9 × 소속기관	56.29	< 0.001	0.12	중간
문9 × 직급	19.87	0.019	0.07	작음

○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관계 (5건)

변수 조합	Chi-square	P-value	해석
문10(업무량) × 군지역	32.15	0.652	관계 없음
문10(업무량) × 시군구분	2.82	0.421	관계 없음
문9 × 군지역	44.86	0.148	관계 없음
문9 × 시지역	39.11	0.123	관계 없음
문9 × 시군구분	6.61	0.086	관계 없음

□ 주요 발견사항

○ 소속기관별 차이가 가장 중요

- 문9 × 소속기관: $p < 0.001$ (가장 강한 유의성)
- 문10 × 소속기관: $p < 0.001$ (가장 강한 유의성)
- 해석: 본청, 교육지원청, 학교별로 대책에 대한 인식과 업무량 체감이 현저히 다름

○ 직급별 차이 존재

- 문9 × 직급: $p = 0.019$
- 문10 × 직급: $p = 0.007$
- 해석: 초급(9급), 중급(7-8급), 고급(6급 이상) 공무원별로 인식 차이

○ 지역별 차이는 제한적

- 시지역에서만 업무량 차이 유의함 ($p = 0.008$)
- 군지역에서는 차이 없음
- 해석: 도시지역 학교/기관의 업무 환경이 더 복잡함

○ 시군 구분은 무의미

- 모든 교차분석에서 유의하지 않음
- 해석: 단순한 시/군 구분보다는 구체적 기관 유형이 더 중요

□ 세부 분석 결과

○ 소속기관별 특징

학교: 628명 (49.9%) – 가장 큰 집단

교육지원청: 216명 (17.2%)

기타 직속기관: 165명 (13.1%)

본청: 164명 (13.0%)

○ 업무량 증가 인식 (문10)

- 매우 증가: 30.95% (389명)
- 다소 증가: 32.38% (407명)
- 보통: 28.08% (353명)
- 감소/매우 감소: 8.59% (108명)

○ 지역별 분포 특징

- 시지역: 대규모 기관 중심, 업무량 체감 편차 큼
- 군지역: 소규모 기관 중심, 상대적으로 균등한 반응

□ 핵심 인사이트

○ 기관 유형이 핵심 변수

- 본청 vs 교육지원청 vs 학교 간 명확한 인식 차이
- 각 기관의 업무 특성과 규모가 반영됨

○ 직급별 인식 격차

- 고위직: 정책 필요성 이해도 높음
- 실무직: 업무 부담 체감도 높음

○ 지역보다 기관이 중요

- 시/군 구분보다 기관 유형이 더 강력한 예측 변수
- 지역 특성보다 조직 특성이 우선

○ 정책 수용성의 다층 구조

- 소속 → 직급 → 지역 순으로 영향력 감소
- 일률적 정책보다 기관별 맞춤 접근 필요

□ 정책 시사점

○ 기관별 차별화 전략

- 학교: 현장 실무 중심 간소화
- 교육지원청: 중간 관리 역할 강화
- 본청: 정책 조정 및 모니터링

○ 직급별 맞춤 교육

- 고위직: 정책 목표와 방향성 교육
- 중간직: 실행 방안과 조정 역할
- 실무직: 구체적 절차와 업무 경감

○ 지역 특성 고려

- 시지역: 대규모 기관 업무 효율화
- 군지역: 소규모 기관 지원 강화

○ 단계별 도입 전략

- 기관별 시범 운영 후 단계적 확산
- 지속적 모니터링과 피드백 반영

□ 결론

- 이번 교차분석을 통해 소속기관과 직급이 회계사고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과 업무량 체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- 특히 소속기관별 차이가 가장 크고 일관성 있게 나타나 향후 정책 수정 시 기관 유형별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.
- 지역별 차이는 제한적이므로, 지역보다는 기관의 규모와 업무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 설계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.

자유의견 분석 결과

- 조사 대상: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교육행정직원
- 응답자 수: 633명
- 조사 내용: 회계사고 근절 지침에 대한 자유 의견

□ 주요 응답 경향

○ 전체적 반응

- 압도적 부정적 의견 (약 85%)
- 일부 필요성 인정하나 개선 요구 (약 10%)
- 긍정적 평가 (약 5%)

□ 주요 비판 의견

○ 업무 과중 및 비효율성

- "행정실 업무만 과중되고 실효성 없음"
- "1-2만원 소모품까지 검사검수는 과도함"
- "교사들 수업 중 검수 처리 어려워 지출 지연"
- "2-3배 업무량 증가, 카드 건수 많은 학교는 업무 마비"

○ 특성행정 비판

- "학교 현장 실정을 모르고 만든 지침"
- "현장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 통보"
- "타 시도에 없는 불필요한 규제"
- "업무경감과 정면 배치되는 정책"

○ 실효성 의문

- "서류 한 장 더 받는다고 횡령이 없어지나?"
- "형식적 절차 증가, 실질적 예방효과 미미"
- "사고 낼 사람은 어차피 다른 방법 찾을 것"
- "요식행위에 불과한 대책"

○ 교무실-행정실 갈등 심화

- "교감들의 강한 반발과 결재 거부"

- "교사들이 카드 사용 기피, 행정실에 구매 떠넘기기
- "검수는 행정실 업무라는 인식 여전"
- "갈등만 조장하는 지침"

□ 구체적 문제점

○ 금액 기준 부재

- "몇천원 소모품도 검사검수해야 하나?"
- "100만원 또는 50만원 이상만 적용 요청"
- "소액과 고액 구분 없는 일률적 적용 문제"

○ 시스템 및 절차상 문제

- "에듀파인 검수 요청 과정 복잡"
- "교사 부재 시 지출 처리 불가"
- "카드 결제일 임박 시 검수 지연으로 연체 위험"
- "납품일자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"

○ 인력 부족

- "1-2인 행정실에서 감당 불가"
- "정원 증원 없이 업무만 증가"
- "나흘로 행정실장의 업무 폭탄"

□ 개선 요구사항

○ 금액 기준 설정

- "100만원 이상만 검사검수 의무화"
- "소모품은 제외, 비품만 적용"
- "30만원 미만은 간소화 처리"

○ 시스템 개선

- "에듀파인 자동화 기능 개발"
- "품의 시 검수자 자동 지정"
- "전자결재 시스템 연계"

○ 교육 및 홍보

- "교장·교감 대상 사전 교육 필수"

- "교사 회계업무 교육 강화""청렴교육을 통한 의식 개선"

○ 현실적 대안

- "강력한 처벌을 통한 경각심 조성"
- "불시점검 강화"
- "학교별 특성 고려한 탄력적 적용"

□ 강한 불만 표출 사례

○ 대표적 의견들

- "몇 사람의 횡령으로 인한 다수의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"
- "회계사고 치는 사람때문에 멀쩡히 일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말도 안되는 대책"
- "빈대도 못잡고 초가삼간 태우는 지침이니 신속한 철회가 필요합니다"
- "탁상행정의 표본. 학교 현장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대책"
- "업무경감이라는 목표에도 역행하는 것이고, 교무실과 행정실의 대립을 격화할 수도 있는 지침"

□ 일부 긍정적 의견

○ 지지하는 소수 의견

- "원칙적으로 사업담당자가 검수하는 게 맞음"
- "법인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"
- "회계업무 기준 마련으로 경각심 제고"
- "검수 책임 소재 명확화"

□ 핵심 쟁점

○ 원칙 vs 현실

- 원칙: 사업담당자 검수가 회계규칙상 맞음
- 현실: 학교 현장에서 실행 불가능한 구조

○ 예방 vs 효율

- 예방: 회계사고 방지 필요성 인정

- 효율: 과도한 절차로 인한 업무 마비 우려

○ 책임 분산 vs 업무 집중

- 분산: 교사에게도 회계 책임 부여
- 집중: 결국 행정실에 모든 업무 집중

□ 결론 및 시사점

○ 현장의 목소리

- 압도적 부정적 반응: 85% 이상이 현 지침에 반대
- 실효성 의문: 형식적 절차 증가로 실질적 예방효과 미미
- 현실성 부족: 학교 현장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
- 갈등 조장: 교무실-행정실 간 업무 갈등 심화

○ 개선 방향 제시

- 금액 기준 설정: 일정 금액 이상만 적용
- 시스템 개선: 자동화를 통한 업무 간소화
- 사전 교육: 교장·교감 대상 충분한 교육
- 현장 의견 수렴: 정책 수립 시 현장 의견 반영 필수

○ 근본적 대안 요구

- 강력한 처벌: 회계사고자에 대한 엄중 처벌
- 의식 개선: 청렴교육을 통한 근본적 해결
- 인력 확충: 업무 증가에 따른 정원 확대
- 차별화된 접근: 학교 규모별 맞춤형 적용

□ 문항 12: 학교별 상황과 특수성

○ 학교 규모별 차이

- 대규모 학교: "하루 지출건 50-80건, 연간 3,000건 이상"
- 중소규모 학교: "2인 행정실도 감당 어려운 업무량"
- 소규모 학교: "1인 행정실(나홀로 실장)의 업무 폭탄"

○ 특수 상황 학교

- 병설유치원: "유치원 간식비까지 모두 검수해야 하나?"
- 단설유치원: "소액 결제 대부분인데 모든 건 검수 불가"

- 체육 특성화: "운동부 합숙비, 대회비 등 복잡한 지출 구조"
- 늘봄교실: "정기 간식 납품 시 매번 검수 현실적 어려움"

○ 지역별 특성

- 농산어촌: "지역업체 이용 어려워 인터넷 구매 불가피"
- 도심지역: "업체 선택권 많으나 교사들 인터넷 구매 선호"
- 접경지역: "물품 구매처 제한적, 검수 더욱 복잡"

○ 업무 환경별 차이

- 정원 3명 이상: "그래도 분담 가능하나 여전히 부담"
- 정원 2명: "한 명은 급여, 한 명은 모든 회계업무 담당"
- 정원 1명: "모든 업무 혼자 처리, 물리적 한계"

○ 예산 규모별 영향

- 대규모 예산: "월 카드 사용 100-200건, 검수 불가능"
- 중간 규모: "적당한 규모지만 인력 대비 과다"
- 소규모 예산: "적은 금액도 모두 검수는 과도"

○ 계절별/시기별 문제

- 방학기간: "교사 부재로 검수 처리 불가"
- 학기말: "집중 지출 시기에 검수 지연"
- 신학기: "준비물 구매 폭증, 처리 한계"
- 행사 시기: "급작스런 구매 시 검수 절차 현실적 어려움"

○ 교직원 구성별 차이

- 경력 교사 많은 학교: "회계업무 이해도 높아 협조적"
- 신규 교사 많은 학교: "매번 설명해야 하는 부담"
- 순환보직 잣은 학교: "업무 연속성 부족"
- 관리자 성향: "적극적 vs 소극적 관리자에 따른 차이"

○ 물리적 환경

- 원거리 학교: "업체 방문 어려워 온라인 의존도 높음"
- 도심 학교: "주변 업체 많으나 가격 경쟁력 문제"
- 교통 불편지역: "물품 수령 확인 어려움"

종합평가: 회계사고 근절이라는 취지는 공감하나, 현 지침은 현장 실정을 무시한 탁상행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,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